

97년 통일정세 전망 :

통일의 현실성과 통일정세의 불확실성

김 창 수

(통일맞이 칠천만 겨레모임 자료실장)

1. 통일의 현실성과 통일정세의 불확실성

한반도 통일문제는 분단 이후 주로 당위와 역원의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80년대 말부터 탈냉전의 세계사적인 지각변동을 겪으면서 현실적인 가능성의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통일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통일정세는 복잡하기만 하다. 북미관계는 대립 속에서 변화가 모색되고 있고, 남북관계는 악화되고 있으며, 한미관계는 협력 속에서 갈등의 씨앗이 무섭게 자라고 있다. 즉 현재의 객관적인 통일정세는 '북미관계 : 대결 속의 관계개선', '남북관계 : 악화', '한미관계 : 협력 속의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미관계는 11월 24일의 마닐라 정상회담을 비롯한 공식적인 한미공조유지발언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지속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즉,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한미관계까지 변수로 작용하면서 통일정세가 복잡해지고 있다. 한반도의 상황이 복잡한 것은 탈냉전의 국제질

서속에서도 냉전질서가 유지되고 있고, 냉전질서의 유지 속에서도 새로운 질서를 향한 변화가 시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양국이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한 것은 변화를 향한 시도이지만, 한편 한미양국은 여전히 독수리 훈련이라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독수리 훈련의 실시는 대결적인 상황의 반영일 것이다. 한미양국은 대규모의 독수리 훈련을 합동으로 실시하면서도, 한편으로 미국의 대북 연착륙 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을 보이고 있다. 한미간의 정책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도 바로 냉전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는 상황의 복잡함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 주한미군을 용인하는 듯한 얼핏 모순되어 보이는 주장을 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들 역시 냉전적인 대결상황속에서도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려는 씨앗이 자라나고 있는 정세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일 게다.

이러한 정세의 복잡함과 미묘함을 꿰뚫는 혜안이 필요하다. 정세가 복잡하고 미묘한 이유는 변화하지 않는 냉전질서 속에 변화의 기운이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운동 진영은 남북한과 미국 3자사이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상황을 현상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반도의 상황이 복잡한 것은 탈냉전의 국제질서속에서도 냉전질서가 유지되고 있고, 냉전질서의 유지 속에서도 새로운 질서를 향한 변화가 시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성과 비동시성이 공존하는 것이 현 정세의 본질임을 간파할 때 비로소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정세 인식이 명확해지는 것이다.

2. 남북한과 미국의 3자관계와 통일정세

지금은 2차대전 이후의 체제가 종식되고 21세기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향한 전환기이다. 2차대전체제를 유지해왔던 동서냉전구조가 무너지고,

WTO체제의 등장으로 경제적인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흐르면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적인 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전후하여 한반도의 통일정세도 많이 변했다. 그러나 한반도의 탈냉전 과정은 세계사의 흐름과는 크게 다르다. 소련과 동구의 붕괴를 전제로 한 탈냉전이 주된 흐름이지만, 동북아시아에는 아직도 중국과 북한이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정세 변화는 동구와 같이 일거에 지각변동의 형태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몇 년동안의 통일정세 변화가 이를 설명해주고 있다.

한반도 통일과정에서는 남북한 정부와 미국정부의 역할이 각별히 중요하다. 세계사가 지각변동을 겪었던 지난 몇 년동안 한반도 통일정세는 팽팽한 긴장이 유지되는 가운데 변화가 모색되었다. 한미 동맹이 북한이라는 사회주의 국가와 상대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일정세를 결정하는 이러한 기본 구도는 앞으로 몇 년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즉 북한의 붕괴가 전제된 상태에서 급속한 변화가 동반되는 방식의 동구형 정세 변화 보다는 북한의 존재를 인정한 상태에서 남북한과 미국의 3국이 관계를 재편해 가는 방식으로 통일정세는 변화할 것이다. 그 이유는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희박하다는 판단과 함께 미국의 의도가 이들 3국사이의 관계를 재조정하여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국익이 보장되는 신질서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97년에도 남북한과 미국의 3국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재편의 성격과 방향이 통일정세를 규정하는 핵심이 될 것이다. 민간 통일운동이 이들 3국사이의 관계재편 방향을 결정하기에는 정치적 능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미약하다. 따라서 민간통일운동은 정치정세에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국민적인 지지기반을 확충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민간통일운동의 과제를 도출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결론이 아니다. 97년도의 통일정세를 살펴볼 때 97년도가 남북한과 미국 3자 사이에 관계재편이 본격화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그리고 98년도 이후 이들 3자관계가 정립되었을 때

통일의 객관정세가 무르익을 수 있다는 점에서, 97년도의 통일운동은 정치력과 국민적 설득력을 확보하는 것에 보다 많이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과 미국 3국의 관계가 통일정세를 어떻게 규정해 왔는지를 살펴야 하고, 아울러 북한 조기 붕괴론의 허구성, 미국의 대북 연착륙정책, 민간통일운동의 현단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1) 남북한과 미국의 3자관계

앞서 지적하였듯이 현재 통일정세의 특징은 ‘북미관계 : 대결 속의 관계개선’, ‘남북관계 : 악화’, ‘한미관계 : 협력 속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이들 3자간의 관계변화가 97년 통일정세를 규정하는 핵심요인이 될 것이다. 그 동안 통일정세는 이들 3자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아왔다. 아니 이들 3자 사이의 관계가 통일정세 그 자체였다. 80년대와는 달리 90년대에 들어와서는 민간통일운동이 이들 3자의 관계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통일정세를 규정하지 못했다. 97년 통일정세를 전망하면서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은 한미관계이다. 분단 이후 지금까지 통일정세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라는 2원적인 관계에 의해서 규정되었다. 한미관계는 혈맹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정세에 변수로 작용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미관계가 갈등 양상을 보임으로써 한미관계 역시 97년 통일정세의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각각 대결보다는 대화를 추구하면서 상호 조율할 때 통일정세가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해 왔다. 지난 몇 년동안의 정세를 살펴보면 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남과 북이 1991년 11월에 역사적인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지만, 미국이 북한의 핵능력에 의혹을 품으면서 북미관계는 전쟁전야적 위기상황을 연출하였다. 남북관계는 대결보다 대화를 추구하였지만, 북미관계는 대화보다 대결을 추구한 것이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상호 조용하지 못함으로써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이라는 역사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통일정세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이후 북한과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능력에 대한 줄다리기를 계속하였다. 92년 5월부터 93년 2월까지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6차례의 사찰을 받았으나 미국의 압력은 계속되었다. 북한은 93년 3월에 핵무기 확산금지조약(NPT) 탈퇴라는 극약처방을 통하여 미국과 대화창구를 만들었지만, 북한과 미국 사이의 힘겨루기는 좀처럼 결말이 나지 않았다. 94년에 접어들면서는 전쟁 가능성이 공공연하게 언론에 보도되었고, 실제로 이 시기에 미국이 전쟁을 준비했다는 것이 유력한 분석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전쟁은 중국과 일본이 동의하지 않는 문제이고, 전쟁의 결과는 궁극적인 미국의 이익과 합치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미국은 94년 6월초에 조성된 전쟁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카터 전 대통령을 북한에 파견하였고, 카터와 김일성의 협상으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남북 사이의 정상회담과 북미 사이의 핵회담이 추진되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모두 대결보다 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상호 조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민간통일운동도 분단 50년을 넘기지 말자는 열망을 대중적으로 드높이려 애썼다.

94년 7월말로 예정되었던 남북 정상회담은 무산되었지만, 북한과 미국은 1994년 10월 제네바에서 북미 핵합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탈냉전의 지각변동이 파생시킨 불확실한 상황에서 제기될 수 있었던 한반도에서의 군사대결 가능성은 완화되었고, 북미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의 급서로 남북정상회담이 무산된 이후 남북관계는 악화되지만 하였다. 남한에서 일어난 조문파동을 계기로, 북미관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이와 조용하지 못하고 악화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현재 통일정세가 불확실한 것은 이처럼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조용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더구나 이러한 결과 한미관계도 갈등을 초래함으로써 통일정세는 불확실성을 빚어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렇듯 남북한과 미국 3자 사이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릉 잠수함 사건과 같은 돌출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남북한과 미국 3자의 상호관계를 ‘남북관계 악화’, ‘북미관계 대립 속의 개선’, ‘한미관계 협력 속의 갈등’이라는 3원적인 관계로 고착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3원적인 관계는 통일과 반통일의 대립구도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97년의 통일정세는 남북한과 미국의 3자사이의 관계 재편이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2) 북한 붕괴설의 허구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과 김정일 체제의 불안정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정보를 획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김정일 체제의 불안정성보다는 북한의 상황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가시적으로는 훨씬 더 불안해 보인다.

90년대 이후 북한이 직면한 문제는, 1) 동구 사회주의 붕괴 이후 세계적인 반제국주의 전선의 와해로 인한 국제적 고립의 심화, 2) 핵공방 과정에서 드러난 북한 체제의 존멸을 다투는 군사적 압박, 3) 김일성 주석의 돌연한 사망으로 빚어진 공백과 북한 주민들의 심리적 박탈감, 4) 수년간 계속된 냉해와 95년의 수재로 인한 곡물생산의 감소와 식량부족, 5) 남북한 경제적 격차의 심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90년대에만 나타난 일시적인 것인지, 북한의 주체형 사회주의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것인지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나 북한 사회주의 체제가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만성적 위기 상태를 노정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북한의 김정일 체제는 이러한 상태를 미국과 수교, 인민들에 대한 사상무장 등으로 극복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현재 징후에 대한 평가를 단정적으로 내리기는 아직은 선부르다. 북한의 붕괴를 가져올 정도의 조짐은 현재까지는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다. 북한 붕괴를 대비할 정도의 상황이란, 북한 주민들의 대규모적인 이탈과 이를 조직하고 지도할 수 있는 집단의 등장, 그리고 현지도체제의 균열현상이 발생했을 때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는 김정일체제를 정면으로 위협할만한 아무런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주변적이거나 일시적일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주관적으로 확대해석하여 북한이 붕괴위기에 놓인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커다란 과오가 될 수 있다.

3) 미국의 대북 연착륙 정책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을 연착륙(SOFT LANDING)시키는 것이다. 즉 북한을 ‘폭탄을 적재한 폭격기’라고 보고, 이 폭격기가 도시 한복판에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연착륙 정책의 핵심이다. 레이니 주한미국대사는 1996년 5월 11일 아시아 소사이어티(Asia Society)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러한 미국의 정책을 잘 밝히고 있다.

“정책대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한편이 확실히 강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인 정책이 ‘강하냐’ ‘연하냐’에 의거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현명한’ 정책인지 ‘어리석은’ 정책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정책이 미국과 한국에 이익이라면 그 정책을 추구해야 하며, 만일 그것이 북한의 이익과도 합치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더 이상 이것이 ‘제로섬 게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치고 나오거나 혼란을 야기하면서 붕괴한다면 우리에게도 이익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익은 북한에 경제지원을 해주고, 긴장을 완화하며, 남북간에 포괄적인 교류관계가 있을 때 커질 수 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의 연착륙 정책은 장기적으로 북한을 미국의 시장경제에 편입시키는 것이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힘의 우위

를 바탕으로 한 대북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연착륙 정책을 ‘북한과 미국의 전략적 제휴’로 바라보는 견해도 있다. 구종서 삼성경제연구소 전문위원은, “북한을 되살려 한국을 견제케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것이 곧 제국주의의 전통적인 대외정책의 하나인 분리 지배가 아닌가” 하면서 미국의 전략을 한국사회의 일반적 논의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한 연착륙정책(Soft Landing Policy)은 96년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다. 미국은 적대국가가 아닌 동맹국들과 관계에서는 일방적 강제보다 협의와 동의를 필요시 한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국가의 정치적 동의와 경제적 지원 없는 미국의 단독행동은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걸프전에서 확인된 바 있다. 미국의 대북 군사강경정책은 일본 등 동맹국가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정책이다.

미국이 연착륙 정책을 구사하는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므로 클린턴 정권이 재집권에 성공한 이후에도 미국의 대북연착륙 전략에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4) 민간통일운동의 현단계에 대한 평가

한총련 통일축전과 강릉 잠수함 사건 이후 민족의 화해와 단결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다. 한총련 사건이나 무장간첩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든 간에, 두 사건은 통일운동의 주객관적인 측면에서 통일운동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한국전쟁 이후 수십년동안 지속되어온 남북의 적대적 대결은 소모적이고 반통일적이다. 뿐만 아니라 적대적 대결은 민족 사이에 미움과 원한이라는 쉽게 치유하기 힘든 감정적 심리적 대결상태를 만들어서 분단의 골을 더욱 깊게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한총련 사건이나 무장간첩 사건은 그 동안의 통일운동을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운동으로 치부해버리

고, “북한의 실체가 명확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더 이상의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운동은 반통일적일 수밖에 없다”는 식의 대결적인 논리에 명분을 실어주고 말았다.

그 동안의 남북 대결은 우리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변화시켜야 할 상황이고 대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의 강압적 통치 아래서도 분단질서를 허물기 위한 노력들이 폭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80년대 말부터 다시 분출된 통일운동은 ‘반미자주’와 ‘민족대단결’을 핵심으로 해서, 민족근현대사 100여년 동안 제기되었던 반외세 민족자주의 맥을 잇는 운동으로 자리잡았다. 80년대 말의 반미운동과 통일운동은 그 주장과 방법이 매우 급진적이었다. ‘미제축출’이니 ‘주한미군 철수’니 하는 주장들이 거리낌없이 제기되었고, 북한의 원전들이 그대로 출판되었으며, 북한의 사상을 아무런 여과장치도 없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 분신이나 투신과 같은 생명을 건 투쟁으로 반미의 무풍지대이고, 반공의 성역이었던 이 땅에서 반미통일운동의 깃발을 올렸다.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씨의 방북 역시 그 방식은 대단히 파격적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급진적인 주장이나 시위방법, 파격적인 방북이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거대한 물길을 만들어냈다.

파격적이고 급진적으로 출발한 통일운동은 80년대에는 분명 대국민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고, 더 나아가 정권을 압박할 수 있었다. 노태우정권이 남북대화해 나가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던 것은 대국민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던 통일운동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통일운동은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80년대에는 통일구호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억눌린 국민들의 통일열망을 대변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결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다. 통일열망을 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국민들의 의식에 자리잡은 핵심적인 문제의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통일은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고, 나아가 북한의 체제가

불안정해서 통일과정에서 남한이 부담해야 할 분담이 너무 클 것 같다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머리 속에 자리잡은 문제의식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국민들의 의식은 과거 군사독재시절과 같이 독재정권의 정권안보용 이데올로기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실패한 사회주의에 대한 직간접적인 체험, 연변 동포들의 실상, 그리고 이번 강릉 무장간첩 사건에 대한 북한측의 대응 태도, 한국자본주의의 양적 성장에 따른 물질적인 소비수준의 증대 등과 같은 요인들이 국민들의 의식을 형성해온 것이다.

통일논의가 일반적으로 봉쇄되었던 80년대와는 달리 90년대에는 제한적이거나 논의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수준도 매우 다원화되었다. 통일논의가 조금씩 확산되면서 기존의 운동권식 통일논의와는 다른 중간층의 통일논의도 등장하였다. 한편으로 80년대식 통일논의에 대해서 친북적이지 않느냐는 의혹의 눈길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통일논의의 제한된 확산과 통일의식의 다원화에도 불구하고, 잠수함 사건과 같은 돌출적인 사건들은 언제든지 통일논의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 것이 또한 분단의 냉혹한 실상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통일운동의 현단계를 진단할 수 있다.

첫째, 80년대와는 다른 90년대의 정세적 특징은 지금과 같은 방식의 통일운동이 과연 더 이상 유효한 것인지를 재고하게끔 하고 있다. 통일운동의 위기는 대국민 설득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떨어졌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민들의 민주의식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는 통일운동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하면서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남북한의 적대적 대결 상태는 언제든지 통일논의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따라서 통일운동은 남과 북의 확고부동한 신뢰를 구축하여 민족의 화해를 이루는 것을 일차적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 남북이 합의한 것이 파기되면 신뢰구축과 화해에 역행하게 된다. 따라서

통일운동은 화해와 신뢰구축을 과제로 삼으면서 남북이 합의한 것이 부정되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 대중적인 힘을 모아야 한다.

3. 97년 통일정세의 변수

1) 한미 갈등

그 동안 한국과 미국 사이에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미묘한 갈등이 있었던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갈등은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에 재선 되고, 김영삼 대통령이 대북 강경책을 펴면서 더욱 분명해졌다. 뉴욕타임스는 96년 11월 17일자에서, “일부 미국 관리들 사이에는 한반도에서 가장 골치 아픈 존재는 한국정부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도할 정도이다.

미국 언론은 김영삼 정부의 대북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기도 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96년 11월 8일 워싱턴 포스트지와 회견에서,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한 북한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는 한, 한국정부는 경수로 건설사업을 비롯한 대북 지원을 유보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지는 다음날인 11월 9일, “미국관리들은 잠수함 침투 사건에 대한 북한측의 구체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김영삼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정책조율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권영해 안기부장이 96년 11월 11일 국회 정보위에서 내년의 국내외 정세와 관련, “남북한 관계는 지금의 경색상태를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데 같은 날 미국 국무부 정보분석실 케네스 퀴노네스 북한분석관은 “북한잠수함 침투사건으로 경색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내년 봄쯤이면 풀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96년 11월 27일에는 김영삼 대통령과 미국의 한반도 정책 실무책임자의 발언이 서로 다른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은

남북대화 없이는 경수로 건설도, 식량문제 해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윈스턴 로드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담당 차관보는, “앞으로 (한국측 반발로) 교착상태가 된 대북 경수로 공급사업들이 수주 이내에 진전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같이 노정되는 한미간의 불일치와 갈등은 김영삼 대통령의 97년 대통령 선거전략에 따라 증폭되거나 완화될 것이다. 즉 현재와 같은 기조를 유지하면서 보수강경책을 구사할 경우와 반대로 통일카드를 선거전략으로 구사할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현 상황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보수강경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는 미국과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북미관계가 진전된다면 보수강경책이 선거에서 거둘 수 있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통일카드를 구사할 경우에 대해서는 북미관계나 북한의 대남 강경책의 변화 등의 변수에 대한 고려 속에서 예측 가능할 것이다.

2) 북미 관계

북미관계는 남북관계나 한미관계보다 변화의 가능성이 크고, 북미관계가 다른 관계에 규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북미관계는 제네바 합의문 이행을 기초로 해서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미군유해송환 등 실무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서서히 관계 개선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북미 대화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북한의 생존을 위한 평화적 환경마련과 한반도에서 미국의 국익확보 보장이라는 모순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이다. 북한과 미국의 국가이익이 조화되는 차원에서 북미관계는 재편될 것이고, 이러한 북미관계가 97년 대통령 선거 이후 통일정세를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오래 전부터 미국과 관계 개선에 심혈을 기울였다. 북한의 김일성주석은 80회 생일을 앞둔 92년 4월 12일, 평양에서 워싱턴 타임스와 단독회견을 갖고 조속한 대미수교를 강력히 희망했다. 이 회견에

서 김일성 주석은, “나는 미국과 강화할 준비가 돼 있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평양에 미대사관이 설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냉전의 붕괴 이후 ‘오늘의 지상명령’이라고 전제하고, “우리 인민과 미국 국민 사이에 봄이 왔으며, 봄이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북한은 여러 차례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잠정적 주둔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 대미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이 취할 수 있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충분한 경제적인 협력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듯하다. 북한의 생존을 위한 평화적 환경마련과 한반도에서 미국의 국익보장이라는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북한이 주한미군에 대하여 철수와 주둔 사이에서 외교적인 언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이해관계의 치열한 대립 속에서 북한이 구사하는 투쟁전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관리들의 주한미군 주둔 용인발언은 미국과 대화를 통하여 새로운 북미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향 속에서 북한이 일정하게 주한미군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공식적인 주한미군 철수 주장과 북한 고위관리들의 주한미군 주둔 용인 발언 사이에 정책적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과 주한미군 용인 주장은 모두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연계시키는 차원에서 협상과정에서 제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목표는 북미관계 개선과 북미평화협정 체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 주장과 주한미군 용인 주장은 모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기되는 주장이다.

북한의 입장을 이와 같이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북미관계 개선의 핵심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적대정책을 해소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에 모아진다. 그리고 가시적인 조치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일 것이다. 현재 북미 연락사무소는 북한측이 개설을 지연하고 있다. 북한이 개설을 지연하는 이유는 여러

가치가 있겠지만 미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대북한 조치의 수준에 북한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완화가 북미사이에 이루어지면 그것은 표면적으로 연락사무소 개설로 나타날 것이다.

미국은 남북대화를 지원하지만 남북대화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북한과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조치를 진전시켜나갈 가능성이 크다. 로버트 갈루치 미국무부대사는 95년 10월 20일에, “남북대화가 미-북간의 연락사무소 설치의 전제조건은 아니다”고 밝혔다. 미행정부가 북한에 개입하여 예방외교 전략을 펼치는 것은 북미 핵협상과정에 이미 나타났지만, 연락사무소 개설과정에서 보다 뚜렷해질 것이다.

97년도에는 북미 사이에 연락사무소 개설문제가 본격화 될 것이다. 이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락사무소의 개설은 북미간에 국교정상화로 이어지는 문제이다. 미국과 베트남의 경우를 보면, 95년 2월 1일 베트남이 워싱턴에 임시 연락사무소를 개설한 이후 약 5개월이 지난 95년 7월 11일 미국과 베트남은 수교를 하였다. 물론 연락사무소 개설 5개월만에 수교까지 발전한 것은 베트남과 수교를 맺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였다. 한반도의 분단 때문에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미국과 베트남의 경우와 같이 연락사무소 설치 이후 빠른 속도로 수교에 이를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미국은 연락사무소가 설치된다면 북한에 대한 개입 정책을 보다 강화할 것이다. 예방외교 차원에서 북한을 끌어들이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한반도 질서의 변화를 동반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이 미국의 개입정책을 간파하고 평양주재 미국외교관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려고 하겠지만 북미관계 개선의 흐름을 부정하는 차원은 아닐 것이다.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에서 국교정상화로 나가는 과정에는 북한 미사일 문제, 4자회담 문제, 미군 유해 송환문제, 한국의 대통령 선거 문제 등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규정하는 것은 역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완화 수준이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연착륙 정책을 통하여 북한 포용전략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적대 정책을 완화해 나갈 것이다. 미국의 연착륙 정책이 장기적으로 북한을 안락사 시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대북적대정책 완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4자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한총련 사건과 잠수함 사건 등의 변수 때문에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완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97년에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변수가 될 것이다. 하지만 북미관계가 본격적으로 변화될 것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3) 남북관계

현 시기에 남과 북이 만나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방도로는 4자회담, 나진 선봉에 대한 한국측의 진출, 북한 경수로 공급과정에서 한국의 재정지원과 인력지원 등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의 적대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이루어지기 힘들다. 남북한의 상호강경책은 과거의 구도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전두환·노태우 정권 시절에는 강경대결속에서도 물밑 대화는 충분히 이루어졌다. 따라서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했던 것이다. 남북한이 대결 속에서도 핫라인을 가동함으로써 적대적 충돌을 억제하고, 서로의 의사를 파악하여 정치적인 일정을 투명하게 예측해 나갔던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남북대결은 안전장치가 없는 화약고 속에서 남북 양측이 인화물질울 손에 들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남북관계는 97년에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북한이 김영삼 대통령과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어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가능성보다도 희박한 것이다. 남북대화의 가능성은 4자회담 이전에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4자회담을 전후하여 북한과 미국사이에 군사적인 신뢰가 마련된다면, 4자회담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정도이다.

4. 통일운동의 방향 정립을 위하여

민간통일운동이 가졌던 사회적 영향력은 최근에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정세도 변화하였고 국민들의 의식도 변화하였다. 시대적으로도 통일 시대를 눈앞에 두면서 민족의 화해를 이루는 문제가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민간통일운동 역시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일운동은 환경의 변화에 맞게 운동노선이나 방식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민간부문에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때만이 통일은 재앙이 아니라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통일운동은 사회적 영향력이 현저하게 약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통일운동은 다시 출발할 수 있다. 다시 출발하는 통일운동은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통일방안 중심의 통일논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통일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통일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통일방안이 있는 한 통일은 안된다”는 냉소적인 말을 새겨볼 필요가 있다. 통일방안 자체에 집착할 때 불필요한 논쟁에 빠져 통일에 오히려 역기능을 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통일과정은 반드시 통일방안에서 밝힌 바에 따라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전쟁의 방식이 아닌 평화적인 수단으로, 어느 한 체제를 급격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 서로 공존하는 과정을 거쳐서, 민족의 이익을 중심으로 번영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합의를 이루면 된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에 진입하는 것이 바로 통일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통일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능동적인 참여에 의한 통일중심세력을 형성해야 하고 민간통일운동은 이점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통일을 역동적인 역사발전 과정으로 이해하자. 통일을 한순간에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필연적으로 통일에 의한 후유증으로 큰 재앙에 빠지고 만다. 통일을 긴 역사발전과정으로 이해하고, 남북의 화해와

평화정착, 정치 경제적인 협력과 의존을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 통일국가를 완성시켜나가야 한다.

셋째, 통일 이후의 체제에 대해서는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논의하자. 통일 이후 체제는 남북한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기초해야 한다. 남북한의 체제경쟁이나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영향에서 벗어나, 21세기의 새로운 삶의 형태를 만들어 나간다는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넷째, 무조건적인 반미구호보다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민족자주노선이 필요하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김영삼 정부의 대북 정책간에 틈이 벌어지고 있고, 클린턴의 대북 정책이 한국정부의 강경책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 무조건적 반미보다는 민족의 이익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섯째, 엄격한 중립적 제3자주의에 기초해서 남북한 정부를 바라보자. 공존공영의 과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상호변화를 유도해야 하지만, 현시점에서는 두 체제의 적대적 대결을 피하고 상호 존중하는 속에서 화해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남북한 정부의 통일정책이 공존공영에 위배될 때는 마땅히 비판하여야 한다. 이는 적화통일과 흡수통일을 모두 비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존공영에 반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서 어떠한 북한체제라도 포용할 수 있는 자세로 북한체제를 인식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남한 정부에 대해서도 통일과정에서 역할을 인정하고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할 때 비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섯째, 남북한 해외동포 사이의 교류와 연대협력은 남한사회의 실정에 기초해야 한다. 남한의 실정을 무시한 무리한 만남과 연대의 추구는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국민들의 참여를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온다.

일곱째, 현시기의 통일운동은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데 초점을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동포돕기운동, 언론감시운동, 통일교육을 위한 교재마련 등이 중요하다. **KLSI**